

| 사회적 대화 현장 |

#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부터 협약식까지

민주노총은 빠졌지만  
합의 정신은 경사노위가 이어받는다

최은혜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은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각종 경제지표는 위험수위를 가리켰고 노동현장 역시 흔들렸다. 위기의 노동현장은 좁은 발판 위에 서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마비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3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합의 이후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좀 더 확대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노사정 간에 제기됐다.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틀을 상정한 것이었다. 4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기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4월 18일 전격적으로 경사노위 박 총리실 주관으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다.

##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구성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었다. 1998년,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2월, 노사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면서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서로 손을 맞잡는 듯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 ‘정리하고 요건 명문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998년, 합의 이행과정에서 경영계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민주노총은 20여 년 동안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해왔다.

이런 민주노총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격 결정했다. 4월 16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해고금지 ▲충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정 비상협의기구 구성과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경영계를 만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에도 4월 21일,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경사노위 밖 사회적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었던 한국노총의 고민이 깊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니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밖에서 하는 사회적 대화는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섰다. 4월 26일과 27일, 한국노총은 연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논의도 노사정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종교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노사민정대책회의 구성과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보호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사노위 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4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위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그 중심축이 경사노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노총은 5월 11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수용했다.

### 한시가 급한데 ... 지지부진한 대화 “시한은 6월 말까지” 못 박은 노동계

한국노총이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탑승하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한국노총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에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로 ▲해고금지 ▲총고용유지 ▲생계보장 ▲전국민고용보험제 등을 제시했다.

5월 13일 첫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됐다. 5월 20일에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6개 단위(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대표자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총리공관에 모두 모였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이름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본회의에서는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모두가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 문화체육관광부

유지를 언급했지만, 미세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5월 26일, 노동계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제출한 요구안은 ▲해고금지 및 총고용유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 및 국가재난 질병관리 인프라 확충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실현 등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었다.

5월 28일 있었던 실무협약에서는 경영계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날 있었던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의 사용자단체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 지원 ▲노동계의 대승적인 고통분담 ▲주52시간 상한제 보완 제도 조기 입법 ▲노동제도 유연화 등이 포함됐다.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제시됐지만, 논의 진행은 쉽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노동계가 임금을 양보하면 경영계가 고용을 보장하는 식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그



© 문화체육관광부

사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두 논의가 겹쳐지면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자 한국노총이 6월 17일 대표자회의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합의시한을 6월 말로 못 박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6월 말에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역시 이튿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6월 말까지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8차 목요일 대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 논의는 분리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인 6월 말 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 합의안은 마련됐지만 끝내 열리지 못한 협약식

연일 노동계가 6월 내 합의를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핵심 쟁점사안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부대표급 협의가 6월 26일 오후부터 진행됐다. 6월 29일 오전 재개된 부대표급 협의에서 잠정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이제까지 도출된 합의내용의 수용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6월 29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합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7월 1일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반면 6월 30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 한국노총은 합의내용을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민주노총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7월 1일 오전 예정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협약식’과 그 이전 진행되기로 한 민주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 합의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1일 오전 8시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 전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9시로 연기했다. 그러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중앙집행위원회 참관을 요구하면서 중앙집행위원회의 개최조차 선언되지 못했다. 협약식이 예정된 10시 30분이 넘어서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협약식이 예정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나서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협약식이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1일 오후, 유감을 표명하며 “합의는 최종 무산됐으나 잠정합의된 내용은 경사노위에서 충실히 논의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한 달 만에 채운 서명란 이후 논의는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22년 만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관측했던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또 다시 민주노총이 제외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의 하차로 이후 논의는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진행된다.

7월 1일, 협약식에 불참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2일 오후에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심의가 부결되자, 3일, 김명환 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대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대의원들에게 묻겠다”고 선언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이 부결되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7월 3일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의 후속계획을 밝혔다. 지난 4월 1일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이행점검위원회를 통해 잠정합의안 내용의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기업종 및 취약계층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미 운영 중인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를 활용해 잠정합의안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면서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잠정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7월 23일 있었던 민주노총의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는 부결이었다. 61.73%의 민주노총 대의원이 노사정 합의안

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결국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주체 중 민주노총을 제외한 5개 주체(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8일 경사노위에서 제8차 경사노위 본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후속논의 및 이행상황 점검의 주체는 경사노위가 되었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된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경사노위라는 틀 속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